

구동에서



김종민 논설실장

대선후보 이재명의 시간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주경야독으로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장학금을 받고 법대에 입학했으며 사법시험(연수원 18기)에 합격했다. 부산에서 노무현의 연수원 특강을 듣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선출됐고,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8년에는 민주당 후보로는 20년만에 경기도지사에게 올랐다. 일부 반발에도 '무상복지 3종 세트'와 '기본소득' 등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재명은 합시다'라는 이미지로 각인됐고 박근혜 탄핵 당시 현안에 대한 강경 소신 발언으로 '사이다 정치인'이란 별칭을 얻었다.

이 후보 앞 여러 수석 가운데 '비주류'가 단연 대명사다. 그래서 2022년 3월9일,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대통령의 입직전직 선화를 쓸 수 있을지 궁금하다.

민주진영의 심장부 광주·전남에 그 길을 물어야 한다.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강대강 진보·보수 대결에서 5%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 기반에서 압도적 지지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후보에게 광주는 정치적 고향이다. 대학 시절 비로소 알게 된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정치 입문 결심의 계기가 됐다는 말이다.

"5·18은 개인적 영달을 위해 살아가던 자를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살도록 바꿨다", "저를 사회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건

5월 광주로, 광주는 제 사회적 어머니다."

"원팀 정신"으로 용광로 선대위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이 과제다. '명낙대전'의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면서 대의를 위한 결단을 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무효표 처리 취소와 함께 결선투표 요구가 잠재돼 있지만 별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니다. 영광 출신 이 전 대표가 지역 순회경선에서 광주·전남 1위를 했다는 점에서도 호남 민심을 살뜰히 챙겨야 하겠다.

당의 결집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직전 대선 및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친문 진영과 경쟁하면서 갈등이 심화돼 갔을 점에서도 호남 민심을 살뜰히 챙겨야 하겠다. 만일 균열이 벌어진다면 과격하다. 진보진영 결집과 중도 확장에 결정적 걸림돌이 된다. 과거의 사례에서도 슬하가 그랬다.

막바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했던 사실은 반면고사다. 아전인수격 해석은 독이다. 2002년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사태를 되돌아보자.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정몽준 의원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건이 일각에서 언급되는 현실을 엄중 직시해야 한다.

호남은 아권동에도 전략적 요충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찬양 발언으

로 화를 짝 높였다. 그러나 곧바로 '미숙했다'며 수습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과 함께 더욱 진정성 있게, 구체적인 미래비전을 약속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국토균형발전이 작금의 시대정신인 바, 광주 군공항 이전, AI(인공지능) 국가산업 선도, 전남 신재생에너지 육성, 국립대 설립 등 공공으로 확충 등 현안에 있어 청사진을 내야 한다.

지난 2017년에 이어 재수 끝에 대권에 다가선 이 후보의 수락 연설 일성은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였다.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건설의 기치로, 정치에 몸담게 된 인연, 광주에서의 다짐과 꼭 닮았다. 부동산 문제엔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뽑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을 맹세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이은 4기 민주정부 계승의 책임이 막중하다. 집권당 대선후보 이재명, 대장동 리스크에서 벗어나 어깨가 한결 가볍다. '불안한 후보론'의 이미지를 깨고 지지세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롯이 그의 시간이다. 특유의 명쾌한 화법과 승부사적 기질이 강해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평가를 받는 '변방의 장수', 드라마틱한 감동을 국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을까. 과연, 호남이 원하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社說

5년 동안 회의도 안 한 전남도 산하 위원회

전남도가 운영 중인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사업위원회, 의원상해해보상심의회,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심의위원회, 도로노선조정위원회, 생활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이들 8개 위원회는 2017년부터 5년간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도 상당하다.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천일염이 태양광발전 확산으로 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천일염산업화추진위는 집짓 모른체다.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는 연간 1회 정기회의, 임시의회의는 필요시 진행한다고 돼 있다. 천일염산업화추진위는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전남지사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회의를 해야 하나 안전 부재 등으로 굳게 닫혀 있다. 유명 무실한 위원회 외에도 지난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34개에 이른다.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다.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재경비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전남도 산하 위원회가 모두 160개에 달하는

상황으로 가뜰이나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맞춰 업무가 태산인데 행·재정력의 낭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로 설치한 위원회와 달리 정부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부터 손봐야 하겠다. 지자체의 자율적인 통폐합이 불가능한 때문이다. 단적으로 회의가 사라진 8개 위원회 중에서 5개나 법령에 따른 것이었는데 말문이 막히고 만다. 연장선에서 지난 5년간 16개 위원회가 신설됐지만 폐지된 곳은 4개, 통합된 곳은 2개에 불과한 현실이다.

5개 가운데 1개 꼴로 '무늬만 위원회',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운영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코로나 발생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세상이다. 비대면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전남도가 해마다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즉각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

'COP28' 양보는 국가의 자존심 버린 결정

정부가 2023년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아·태지역 내에서 경쟁을 벌여온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하고 33차 총회(COP33) 유치로 선회했다.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서 아쉬움이 나오는 가운데 2030 부산 양보도 개최가 그 배경이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COP28은 13년 전 전남과 경남의 12개 시·군이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최초 제안하고,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계획으로까지 승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를 비롯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 10월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에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은 정부가 스스로 모순된 결정을 한 것이고,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저버린 정책 결정을 했다면서 강력한 유감과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은 앞으로 '기후위기대응 선도도시'로도

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 역시 김영록 지사 명의의 입장문에서 COP33 유치로 전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기후변화대응선도지구 특별법' 제정과 '탄소중립실증 산업단지' 조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년 간 COP28 유치를 위한 남해안남중권 주민들의 열원은 뜨거웠다. 지자체는 빈틈이 없도록 준비에 전력해 왔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으니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불거져 더 분통터하는 모습이다. 갑작스런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뒤따라야 하겠다. 앞으로 내년 대선공약 반영 등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도 지속해서 이끌어 내야 한다. 아쉬움이 많지만 의지를 모으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중대 현안이다. 2028년 COP33 총회를 반드시 품어야 한다. 다시 팔을 걷어야 할 때다.

김영순의 '문화터치'



광주문화재단 문화융합본부장

지역 청년예술가 육성이 K컬처의 자양분

아는 사실이다. 이 단체는 지난 해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단편영화를 제작했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모 영화제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다.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막하다. 이게 지역에서의 청년예술가들이 처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단편영화 제작을 돕는 안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영화제작의 기반이 약한 지역 실정 때문에 오히려 영화제작 일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하여 알바를 전전한다 보면 정작 하고 싶은 영화 제작 지원 공모사업이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이게 영화제작에 국한된 일만은 아닐 터다.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가슴앓이일 거다.

워크숍이 있기 전 날 개최된 본 행사, 아시아문화포럼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세션별 연관성이 긴밀하지 못했다는 따끔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포럼의 구성은 주제세션 'K컬처, 전복과 재배치' 제1세션 '한류문화의 두 얼굴' 제2세션 '탈지역 광주에서의 영화관련 일은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힘들고 고단하다. 그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웬만한 이는 다

계와 맥락은 한계가 있었다. K컬처의 강력한 공세를 아시아적 관점에서 들여다 본 후 G컬처의 K컬처로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최선에서 행해줄 청년예술인들활동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었다. 나름 맥락을 잊고자 했으나 K컬처라는 큰 물결속을 헤집다가 갑자기 지역 청년 예술인들로 여러 단계 특 떨어지는 느낌이었나 보다. 사실이 그랬다. 비교적 큰 담론이었다가 너무나 소소한 지역이야기로 좁혀지면서 괴리감이 갈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처한 현실이 고되고 막막함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전 세계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오징어게임'이나 BTS의 활약이 아니라 K컬처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단군 이래 한반도가 이처럼 급부상했던 적이 없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경사다. 정 말 받가는 일이다. 광주시와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광주문화재단이 2021아시아문화포럼의 주제로 'K컬처와 아시아의 청년'을 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무조건 좋은 것만을 조명하지 않았다. K컬처의 빛과 그림자, 도시와 청년문화' 제3세션 '아시아의 청년, 문화의 경계를 넘다'였다. 준비단계에서 다방면으로 고찰했으나 이들의 유기적인 관

실은 그대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 포럼의 앞단에 특별대담으로 엠비유어스앤스컴퍼니의 김보람에술감독을 흥성경 서울대교수가 영상인터뷰로 처리한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듣고자 했던 취지에서였다. 반응이 뜨거웠다. 이날치벤드와의 작업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김보람감독의 예술가적 면모 못지 않게 자연인으로서의 맨 얼굴도 만날 수 있어서였다.

클로징 시대 K컬처는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콘텐츠로 채워져야 한다.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의 지역과 지역을, 세계 각 지역의 청년과 청년을 연결해 창의적 용광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지역 청년예술가의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저절로 그들이 활동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청년 예술가에 대한 육성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 중심의 K컬처, 대형기획사의 결과물들로서의 K컬처만이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K컬처의 생명력을 오래오래 유지하려면 지역의 문화예술이 기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합동 캠페인 나가기 위해선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금 이 바로 그 때다.

독자투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은 패러다임 전환으로부터

패러다임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 가치, 기술 등을 망라한 총체적 인식의 집합체로 정의된다. 이때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당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단편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한다. 이에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경찰의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단속 및 시설보강과 함께 패러다임

의 전환이 해결책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본격 나들이 시기인 가을 행락철로 접어들면서 야외활동과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행자 스스로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사람이 먼저임을 인식하는 교통문화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를 목표로 시설개선 및 현장 교통안전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행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내려는 의식개선과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도로상 새로 도입되는 교통법규를 설명하고 교통안전 눈높이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는 한편, 인지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을 위해 무단 횡단 방지 펜스, 횡단보도 조명장치 등 고령 보행자 전용 교통시설물의 확충도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합동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선진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준히 시행하는 한편, 인지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을 위해 무단 횡단 방지 펜스, 횡단보도 조명장치 등 고령 보행자 전용 교통시설물의 확충도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합동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선진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용·구례경찰서 교통관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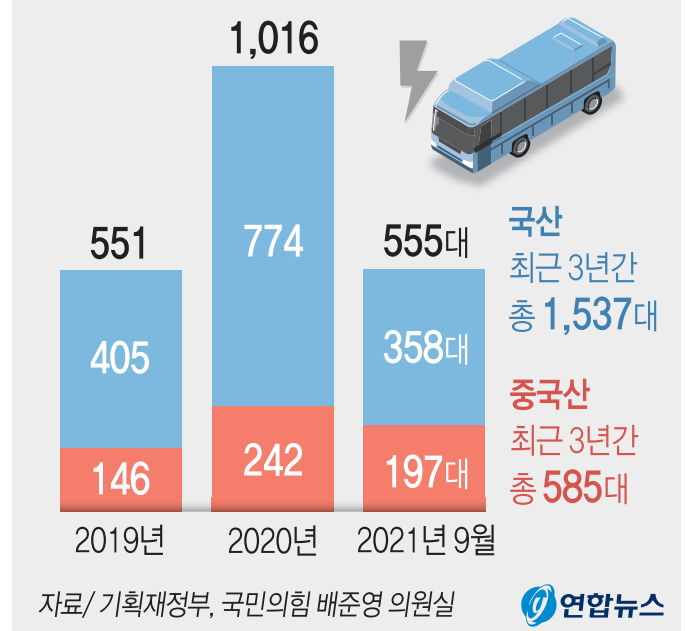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그래픽 뉴스

최근 3년간 보급 전기버스 10대 중 3대는 중국산

전기버스 국내 보급 현황



정부는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중국산 버스 보급 확대에 이어졌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면세 혜택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국산 전기버스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72
정치부 650-2030	사건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